

# 韓·美 방산기술 협력의 발전방향 (1)

權 泰 榮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공학박사

탈냉전 이후 무기이전 및 방산기술과 관련된 안보 환경이 급속히 변화됨에 따라 韓·美간의 방산기술 협력문제도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여건하에서 韓·美 양국간에 잠복 내지 표출된 시각의 차이를 주요 이슈별로 분석, 정리하여, 상호간에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21세기를 지향한 협력방향을 개념적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이 글은 필자가 1993년 10월 미국방연구소(IDA) 주관으로 개최된 “방산기반 확보” 세미나에서 발표한 「방산협력의 주요장해요인에 관한 한국인의 시각」을 설문조사를 통해 보완한 것이다.

—필자 주—

**탈냉전** 이후 무기이전과 관련된 국 내·외의 안보환경이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 韓·美간에도 상호의 입장을 이해한 바탕위에서 방산협력관계를 새롭게 모색해야 될 중요한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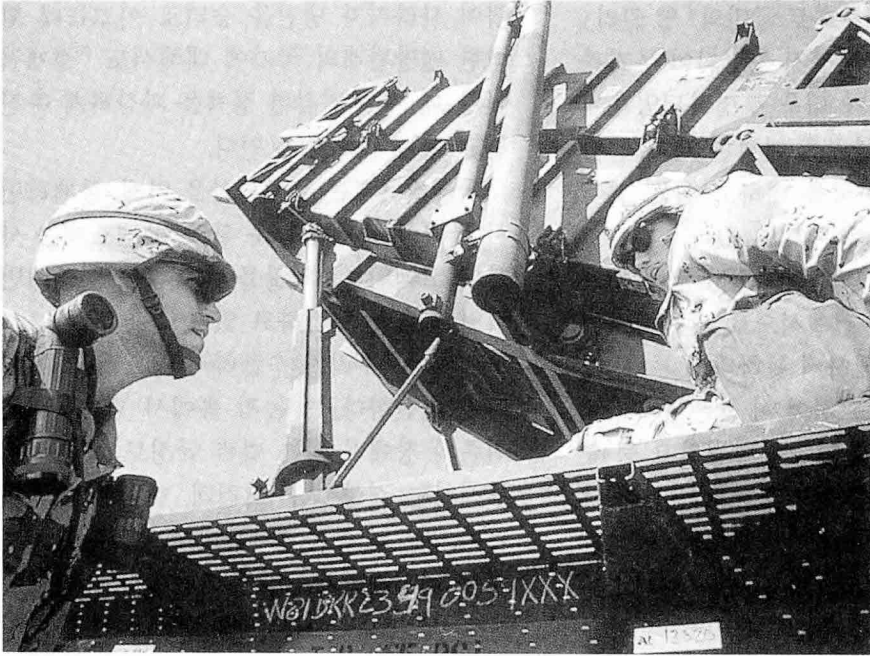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탈 냉전이후 국제무기시장은 과거 판매자의 입김이 지배 하던 형태에서 구매자의 선택권이 오히려 거래관계를 지배하는 형태로 변모하였다.

미국도 「Bottom-Up Review」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군사력 축소작업에 돌입, 95년 국방예산이 85년 대비 50% 수준으로 축소되고, 이에 따라 美 국방부의 주요무기 구매소요가 85년 대비 50~100%까지 감소하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 방산업계가 근본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다.

미국은 이와 같은 대 전환기를 맞이하여 과거의 무기거래 주고객을 그대로 관리하는 한편 무리수를 써가면서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기에 급급한 현상을 노정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전통적인 주요 고객 중 하나이다. 지난 91년 이전만 해도 한국은 해외 무기수입의 80~90%를 미국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92년도에 그 점유율이 50% 수준으로 격감하게 되자, 미국은 한국의 방산협력 다 변화정책에 불편한 심기를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표출시켜 왔다.

필자가 최근 워싱턴 소재 주요 안보관계 연구소(CSIS, CAA, CNA, RAND, Carnegie endowment, SAIS 등)에 재직 중인 전문가들을 상대로 설문 및 면담한 결과, 약 12%의 전문가가 한국의 다변화 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고, 약 40%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어려운 입장을 고려해서 미국무기를 구입해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 한국의 군사전문가들은 한국의 방산협력 다변화는 여러가지 이유 중에서도 미국이 對韓 방산기술 이전을 지나치게 규제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진은 주한미군에 배치된 패트리엇)

한편, 미국의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문제와 관련하여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주한미군의 2단계 감축계획이 중단됨에 따라 한국이 다시 미국위주의 무기도 입정책으로 선회할 것으로 예측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북한 핵문제가 韓·美 방산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고 설문한 사항에 대해서 응답자의 약 32%가 전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24%가 무기를 좀 더 많이 팔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견을 피력했으며, 30% 정도가 미국이 한국에 대한 무기 및 기술이전 규제를 좀더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인식에 대해 한국은 어떠한가? 한국도 상당한 불편감을 노정하고 있다. 한때 한국여론의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이 순수한 방어무기

인 “Patriot”를 한국에 배치하겠다는 당연한 自衛的 配備계획 조차도 일종의 對韓 판매 전략이라고 비판하고, 한반도의 긴장고조가 美 방산업체들이 동원하여 만든 고도의 무기판로전략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조차 이면적으로 거론되기도 하였다.

美 의회가 한국이 통일이후의 불확실한 미래위협보다는 우선 당장 급한 북한으로부터의 현실적 위협에 대비한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페리 美 국방장관 방한시 한국군의 취약점 보강을 우선시하자는 요구를 한국이 상당히 수용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미국의 무기판매압력으로 일각에서 거론한 바 있다.

한국의 군사전문가들은 한국의 방산협력 다변화는 여러가지 이유 중에서도 미국이 對韓 방산기술이전을 지나치게 규제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미국은 국제무기시장이 구매자 중심으로 전환

되고, 한국의 정치민주화로 국민의 「알 권리」가 무기획득사업 구석까지 확장되어 무기관계의 의사결정절차가 더욱 투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산협력에 관한 과거의 종속적인 시각으로 한국을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감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사고 및 의식의 相衝性은 韓·美간의 방산협력을 건설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양측에 공히 유익하지 못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을 배경으로하여 이 글은, 첫째, 韓·美 방산협력의 주요 이슈를 발견하고, 둘째, 상호간의 시각차이를 논리적으로 정리한 다음, 셋째,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산협력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제시하여, 21세기를 지향한 韓·美안보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 주요 이슈와 시각차이

지난 4월 23일자 위싱턴판 한국일보를 보면 韓·美간에 방산협력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읽을 수 있다.

동일 페이지에 게재된 한 기사내용은, 미국의 클린턴 정부가 「경제안보」를 최우선정책으로 설정하고,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 북한의 충동적인 도발을 억제하는 동시에 돈벌이도 하겠다는 속셈으로 美 국방장관이 첨단무기를 한국이 구매하도록 요구한 것을 한국이 상당히 수용했다는 이야기고, 다른 기사내용은, 한국정부가 미국기술로 만든 방산제품의 제3국 수출을 승인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美측에서 의도적으로 누장을 부리고 있다는 이야기로서 韓·美 방산협력관계의 현주소를 잘 설명해 주었다.

미국은 탈 냉전 이후 소련이란 거대한 위

협이 사라지자 냉전을 승리로 이끄는 데 협력한 맹방관계의 국가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익」에 매우 민감한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으로는 무기확산을 억제, 통제하면서 국내의 규제는 더욱 완화, 93년도에는 사상 최고액인 340억불을 수출하는 이윤배반적인 모습을 노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가 수출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대신한다』는 논리 속에서 필요하다면 기존의 장애가 되는 법과 규정도 바꾸거나, 무시하는 경향이다. 예컨대, 미국은 중국이 파키스탄 및 중동국가들에게 무기판매하는 것을 비난하면서, 82년 대만에 무기판매를 축소시키겠다는 중국과의 공동선언을 무시하고 대만에 150대의 F-16기 판매를 결정했고, 최근에는 美 의회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조건을 철회시킨 바 있다.

또한 미국은 미국의 방산업체가 국제사회에서 起債하는 것을 재정보증하는 등의 방식을 채택, 유가하락으로 인해 돈이 없는 사우디아라비아에 92억불어치 무기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美 국방부는 99년까지의 국방예산 부족분 200억불을 보충하기 위해서 F-16기 400대의 재고분을 개량(Upgrade)해서 판매함과 더불어, 95년부터 국내소요가 전연없는 M1 탱크의 생산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M1 전차 개량(Upgrade)과 해외판매를 계획하는 등, 다양한 무기판매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미국은 Singapore Airshow에 軍이 국방예산을 사용해서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는 바, 무기관측을 위한 정부예산사용은 카터정부 이후 금기시 되었던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미국의 무기판매형태를 고찰하

면, 韓·美 방산협력관계에 어떤 묘안이 발견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지만, 많은 안보전문가들이 韓·美 안보관계가 현재는 물론 한반도 통일이후에도 긴밀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양국간의 방산협력도 긍정적으로 발전되길 희망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의 단기적 이해상충을 조기에 해소시키도록 상호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선 몇가지 주요관련 이슈를 열거하고, 양국간의 견해차이를 우선 정리해 보고자 한다.

#### • 방산협력의 기본자세

미국의 對韓 방산협력 기본자세는 전직 국방부 관리였던 설리반(Gerald Sullivan)씨가 잘 묘사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는 『미국의 관리들은 아직도 한국을 종속관계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했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무기를 사는 것은 당연하다는 식의 저변인식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미국은 한국 안보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이를 한국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으며 마음속 깊이 감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도 미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미국이 이 점을 과소평가한다면, 그리고 미국이 한국 못지 않게 미국으로부터 빛을 많이 지고 도움을 많이 받은 미국의 다른 동맹국가에 비해 한국을 상당히 차별적으로 대한다면, 미국에게 섭섭한 생각을 안 가질 수 없고, 한국이 미국에 대한 애정과 기대가 큰 것에 비례하여 반사적 거부감정이 생길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된다.

미국은 한국전쟁에 참전, 상당히 비싼 대가를 치르고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켰고, 한국군 현대화 및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서 절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현재



◀1987년 국내기술로 독자개발하여 실전 배치한 한국형 88전차(K-1)



▲ 1982년부터 면허생산한 경전투기 F-5E/F (제공호)

이 순간에도 주한미군을 DMZ 근처에 배비, 「Trap-wire」 역할을 담당, 한국 안보를 거의 보증하다시피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도 미국의 맹방으로서 빛을 값기 위해 능력껏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미국이 월남전의 늪에 빠져 고군분투할때 약 5만의 전투병력을 파월, 외로운 미국을 실질적으로 도운 유일한 국가였고, 최근 걸프전에서도 능력껏 군사 및 재정적 지원을 했으며, 소말리아 평화 유지군에도 참여했다.

한국은 주한미군 경비로 연간 약 28억불에 상당하는 주둔비 지원을 하고 있는 바, GNP 대비 비율로는 미국의 동맹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부담이며, 무기구입도 미국과의 특수한 안보협력관계를 고려해서 총 해외무기수입 중 미국무기의 점유율이 85% 이상을 차지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방산협력면에서 미국의 다른 동맹국가들과 비교해 볼때 한국을 차별화하는 느낌을 주어왔다. 미국은 대전 중 미국의 적이었던 독일과 일본에 대해서 전후

복구는 물론 경제 기적 창출에도 일등공신이었고, 「안보무임승차」라는 조어가 탄생할 정도로 많은 안보지원을 해 주었다.

미국은 이러한 NATO 선진국가들에 대해서 무기거래에서의 쌍방무역(Two Way Street)을 허용, 사실상 「Buy American Act」를 철회하였고, 「Military Trade Balance」개념을 수용, 미국과 NATO국가간 무기교역의 gap을 축소시킬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우리의 이웃나라인 일본에 대해서도 다양한 공동생산계획을 통해 군사기술이전에 상당히 관대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한국과 이들 미국의 동맹국가들과는 기술적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정도가 지나치면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차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필자의 면담 및 설문 결과, 응답자의 상당수가 미국이 방산기술협력에서 한국을 미국의 타동맹국가와 전연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34%), 어떤 구분되는 바에

대해 지식이 없다고 의견을 표시했으나(38%), 특별히 이 분야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들은 약간의 차별이 있다는데 동의하였다(20%).

#### •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미국은 한국이 미국무기를 구매해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논리로 「상호운용성」을 활용해 왔다. 즉, 한국은 미국과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고,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므로 군수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장비의 상호운용성이 필수적이고, 따라서 미국무기를 구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은 이와 같은 미국의 주장에 대해서 그 타당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현대전에서 장비의 “RSI(Rationalization-Standardization-Interoperability)”는 군수문제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RSI”도 무기체계를 선정할때 고려해야 될 여러가지 많은 요소들 가운데 한가지 요소일뿐 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한 국가가 무기체계 획득대안을 선택할 때는 「상호운용성」 뿐만 아니라, 성능, 비용, 기술이전, 획득 시한, offset 조건, 국내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예컨대 제안된 무기체계가 다른 대안보다 훨씬 비싸거나, 성능이 상당히 뒤떨어지거나, 획득기간이 아주 오래 걸리거나, offset 등의 부대조건이 매우 불리하다면 「상호운용성」 요소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비중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최근 필자가 미국의 전문가들을 상대로,

미국이 한국에게 미국제 무기를 구입하도록 설득하는데 가장 큰 무기로 사용하는 「상호운용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설문한데 대해서, 응답자의 32%가 한국이 미국과 연합작전을 원한다면 「상호운용성」은 어떤 다른 요소와도 비견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의견을 피력한 반면, 46%는 「상호운용성」은 무기도입선을 결정하는 여러가지 고려요소 중에 하나이고, 어떤 경우에는 「비용」 또는 「기술이전」이 「상호운용성」보다도 중요할 수 있다는데 동의를 표시하였다.

더욱이 한국은 이제 사회전체가 민주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김 대통령의 「깨끗한 정부」 개혁운동으로 과거 성역시 되어왔던 무기획득사업이 국민적 감시하에 투명화되고, 그 절차도 주요사업별로 국회의 심의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아울러 과거 무기획득사업과 관련해서 뇌물을 수수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많은 고위직인사들이 처벌을 받음으로써 이제 무기관련업무담당 공직자의 업무자세 또한 가일층 공명정대해졌다.

이처럼 한국의 국내사회가 크게 변모된 상황여건하에서 만일 국제시장에서 미국무기보다 훨씬 값이 싸고, 성능이 軍의 요구수준을 만족하며, 기술이전 등 부대조건이 매우 유리한 도입선이 있다면, 「상호운용성」의 중요성만을 강조하여 미국무기를 선택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국민을 설득,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인가?

거시적 차원에서 韓·美 연합방위체제의 중요성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해득실이 너무 대조가 된다면 국민은 그 사업에 부정이 개입되거나, 아니면 정부가 무능한 것으로 의심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는 韓·美 양국 모두에게 이롭지 못하다.

차제에 「상호운용성」에 관해 1가지 의견을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즉, 미국이 「상호운용성」을 그처럼 중시하여 한국이 미국제 무기체계를 도입했는데, 이들 무기체계 상호간에 interface가 잘 되지 않아서 연합 및 합동작전수행이 어렵다면 미국은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예컨대, 한국의 陸·海·空軍이 각기 軍別로 미국이 개발, 생산한 전술지휘통제시스템을 각각 도입했는데, 이들 시스템간에 interface가 안되어 3軍 합동작전이 제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였고, 지금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해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 제3국 무기수출

한국이 미국기술지원으로 만든 무기를 제3국에 수출할 때는 미국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약정되어 있고, 지난 89년도 제21차 韓·美 연례안보회의(SCM)에서는 미국생산시설에서 중단된 무기일 경우 8%의 로열티(Royalty)를 美측에 부과하면 제3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한국이 미국기술지원으로 만든 M16, 박격포, 탄약 등은 아주 기본적인 무기류이므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미 관심밖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제3국에 수출하면 미국은 로열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유사시에는 한국의 방산시설을 미국의 세계전략수행에 활용할 수도 있으니, 韓·美 공히 유익한 것이 아니냐는 호혜이익의 논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와 같은 한국의 제3국 수출요구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1983년 한국이 M16소총을 인도네시아에 미국정부의 승인없이 판매한 것이 美측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도화선이 되고, 이어서 1989년 한국이 요르단에 군복(Uniform)을 판매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美측은 정밀무기와 관련된 software item이라고 생각, 불신이 증가하게 되자, 90년대에 들어서서는 사실상 제3국 수출이 완전 중단된 것과 다름이 없게 되었다.

그후 89년 韓·美간의 특허료(Royalty Fee) MOU 체결로 한국측은 다시 상당한 기대를 걸었으나, 최근 한국이 각종 대포와 APC 등 약 15개 종류를 동남아와 남미에 수출이 실현되도록 승인해 줄 것을 美측에 요구했는데, 美측이 응답해 주기로 약속한 시한이 상당히 경과했는데도 반응이 없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한국은 미국이 한국의 제3국 수출을 통제하는 것을 美측입장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양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軍의 추가적인 소요로 생산하고자 하는 미국기술에 의한 무기류에 대해서도 미국의 승인을 요구하는 점, 더욱이 미국이 한국산 부속품을 미국제공기술로 만든 무기체계에 사용하는 것을 금한 점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많은 학자들이 방산 및 군수의 globalization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군에 소요되는 모든 유형의 무기류를 미국이 전부 개발 및 생산한다는 것은 비용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동맹국의 군사연구 및 산업시설을



◀ 한국군의 H-X 획득 계획에 의해 면허 생산한 Sikorsky社의 UH-60P Black Hawk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미국의 군사비 격감으로 방산시설을 대폭 축소조정하여야 하는 처지에서는 더욱 동맹국과의 협력이 긴요하다는 논리이다.

만일 이 논리가 정당하다면 미국은 한국의 제3국 수출문제를 너무 지나치게 제약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느정도 풀어주는 것이 탈 냉전 이후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低强度 분쟁 상황에 대처해 나가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절충교역(Offset)**

「offset」은 오늘날 무기(기술) 이전 거래시 세계 모든 나라가 통상적으로 널리 활용하는 일종의 관행이 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생산수준이 낮은 국가들은 무기도입의 기회가 선진군사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offset 조건을 활용한다.

미국은 한국이 이와 같은 국제무기시장의 관행을 미국무기(기술) 도입시에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데 대해 불만을 가져오다가, 급기야는 美 정부가 민간차원의 offset에 직접 개입하는 선례를 최초로 한국에 남기게 되었다.

즉, 미국의 기존 offset 정책은 정부는 무기거래 당사국의 기업간 offset 약정에 간섭하지도 않고, 그 이행에 대해 보증하지도 않는다는 것인데, 美 정부는 한국과 KFP사업 체결시 정부가 최초로 개입, offset의 상한을 구매예정가격의 30% 이내로 한정시키도록 조치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美 안보관계전문가들은 대부분 모르고 있었으며(60%), 이를 알고 있는 사람(40%) 중에서 약 50%는 이와 같은 정부의 개입이 상당기간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약 50%는 정부개입을 축소시켜야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對韓 방산(기술) 협력에 여러가지 규제가 제법 많다고 생각한다.

Offset에 있어서도 과거 전례에 없던 정부개입을 왜 한국에 최초로 적용하는가에 대한 섭섭함이 있고, 미국정부가 기업간의 거래에 관여, 미국기업을 과잉으로 보호하면, 종국적으로 그 기업은 국제경쟁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원칙론에 비추어 볼때, 미국의 이러한 관여는 필히 지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 한국은 주한미군 경비로 연간 약 28억 불에 상당하는 주둔비 지원을 하고 있는 바, GNP 대비 비율로는 미국의 동맹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부담이며, 무기구입도 미국과의 특수한 안보협력관계를 고려해서 총 해외무기수입 중 미국무기의 점유율이 85% 이상을 차지해 왔다

### • 기술이전 및 다변화

70년대는 韓·美 양국의 방산기술협력 밀월시대라고 칭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미국은 많은 TDP를 제공, 한국방위산업의 기초를 구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80년 중반이후, 한국이 요구하는 기술이전수준이 높아지고, 한국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미국은 소위 경쟁자의 의식을 지니고 제한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년간('71~'90) 총 932건의 TDP를 한국에 제공했는데, '70~'84 기간 중에 915건을, 그 이후는 불과 17건을, 그리고 89년 이후부터는 거의 단절된 상태이다.

기술이전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보면, 한국은 TDP를 제공해주면 그 제품을 제3국에 수출하게 해달라고 거듭 요구하고, 지적소유권에 대해 전반적으로 등한하며, 한국의 비약적인 경제기술 성장속도를 보면, 장차 또 하나의 다른 일본이 될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美 안보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이 무기수출을 신장하기 위해서 관련 규제를 가능한 한 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응답자의 상당수(47%)가 한국에 대한 현재수준의 기술이전규제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식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최선의 구매선이라는 기본정책에는 변함이 없으나, 軍이 요구하는 무기의 기술수준은 높는데 미국이 이를 지나치게 통제하니, 부득이 기술이전 조건이 좋은 서구국가들과 협력할 수밖에 없다고 자연스럽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미국은 완제품이라면 첨단기술성격의 무기도 판매할 수 있다고 제안하겠지만, 오늘날 기술이전을 고려하지 않고 무기를 구입하려는 나라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은 국방부가 앞장서서 일본으로부터 미국의 일반기업이 필요로하는 共用技術(Dualtechnology)을 획득하기 위해서 일본에 군사기술(대유도탄요격기술 : TMD)을 제공하려고 시도하는데, 무기와 관련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Offset” 마저도 한국이 적용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본다면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한국은 미국이 한국에 선진기술이전을 기피하고, 기술이전시에도 부품국산화, 제3국 수출 등 여러면에서 부대규제가 심함에 따라 다른 상대를 돌아보게 되었고, 때마침 서구 국가들(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의 적극적인 방산시장활로 개척과 이해가 부합되어 이들 국가와 방산협력 다변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더욱이 이 와중에 러시아는 한국의 對러 경협차관에 대한 이자 지급이 어렵게 되자 잠수함 등 첨단무기의 공동생산 및 판매까지 제의하고 기술이전 특허료와 상계하자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미국은 현실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한국주변의 무기거래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미국도 한국의 다변화정책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필자가 방산협력 다변화 이유에 대해 설문 및 면담한 결과, 응답자 중 32%가 제3국(프랑스, 영국, 독일 등)이 미국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고, 24%는 미국이 기술이전을 과도하게 기피해서라고 보고 있었으며, 20%는 주한미군 감축우려와 관련해서 미국무기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라는 시각을 표출하였고, 나머지 24%는 논평을 유보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



---

#### 참 고 자 료

▲ Andrew F. Krepinevich, 「The Bottom-Up Review : An Assessment, Defense Budget Project」, Defense News Washington D.C., 1994년 2월 14일 ~ 20일

▲ Korea Times. (Washington D.C.). 1994년 5월 7일  
 ▲ William Green and Tom Blau, 「South Korean as an Arms Market」, 〈Military Technology〉, 1993년 11월호, p.63  
 ▲ News Review(1994. 2. 12). 워싱턴관 한국일보('94. 4. 23)  
 ▲ Korea Times(Washington D.C.). 1994년 4월 23일  
 ▲ James A. Blackwell, Jr., 「Defense Industrial Cooperation in Asia」, A New World Order and Security of the Asia-Pacific Region, edited by Pak Chae-Ha, etc., KIDA, 1993  
 ▲ Arms Control Today, May, 1994, 「Global arms sales show decline, But upswing could come soon」, 1994년 5월, p.22  
 ▲ LA Times, 1994년 4월 27일  
 ▲ Korea Times. (Washington D.C.) 1994년 2월 3일  
 ▲ Washington Post, 1994년 2월 1일  
 ▲ Rocky Mountain News, 1994년 2월 20일  
 ▲ Korea Times. (Washington D.C.) 1994년 2월 23일  
 ▲ Arms Control Today, 1994년 3월  
 ▲ Richard Bitzinger, 「Backgrounder : The Defense Spen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Defense Budget Project, 1994년 6월, p.13  
 ▲ 한남성, 「전환기의 한미 방산협력전략」, 국제문제, 1993년 3월호  
 ▲ Victor D. Cha, Politics and Democracy Under the Kim Young Sam Government, Asian Survey, Vol. XXXIII, No. 9, 1993년 9월, pp.849~863.  
 ▲ 한국일보(워싱턴), 1994년 3월 14일  
 ▲ FBIS-EAS-94-090 1994년 5월 10일, p.27(“U.S. Restriction of Defense Industry Alleged.”)  
 ▲ 한국일보(워싱턴), 1994년 4월 26일  
 ▲ 한남성, '92 방산정책개발 특별 심포지움 발표내용, 1992년  
 ▲ Robert W. Backstead, 「International Logistics Cooperation : the US-ROK Experience」, 1994년 4월  
 ▲ Ku Sang-hac, 「Regional Stability and Defense Cooperation」, A New World Order and the Security of the Asia-Pacific Region, edited by Pak Chae-ha, KIDA, 1993, pp. 225~237  
 ▲ 한국일보, (워싱턴) 1994년 3월 12일  
 ▲ 한국일보, (워싱턴) 1994년 1월 22일  
 ▲ Baltimore Sun, 1994년 8월 24일  
 ▲ 한국일보, (워싱턴) 1994년 4월 30일  
 ▲ Robert Maudel, 「The Transformation of the American Defense Industry : Corporate Perceptions and Preferences」, Armed Forces and Society, Winter 1994, p.175